

2020년 업무보고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2020. 2. 27.



행 정 안 전 부
경찰청 · 소방청



목 차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2020년 핵심 추진과제	
2. 쟁점(갈등) 과제	
IV.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	21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선제적 재난 대응과 사고·범죄예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 확보

- 국가 재난대응체계 신속 가동으로 동해안 산불·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 강원 산불(19.4.4.) 발생 초기 중대본 신속 가동 및 범정부 총력대응*, 여름철 최다 태풍(7개) 내습 등 극한 조건에도 선제적인 대비
 - * 소방관 3,251명·소방차 872대 조기 투입으로 양양산불(05.4월) 대비 진화시간 19시간 단축
- 생활 밀접시설 중심의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및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추진, 공익신고 활성화** 등 안전문화 확산
 - * (19년) 지자체별 평가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18년 77.3% → 92.1%) / ** 주민신고제 도입 등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완수(20.4월 전면시행)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립 소방연구원 개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25%p ↑) 등 안전투자 지속 확대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안전속도 5030 등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도로 위 안전 확보, 성폭력·마약 등 생활주변 악성범죄 엄단으로 체감안전 향상
 - ※ 교통사고 사망자 11.3%↓(음주운전 사망은 29.0%↓), 경찰청 조사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74.7점)

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의 초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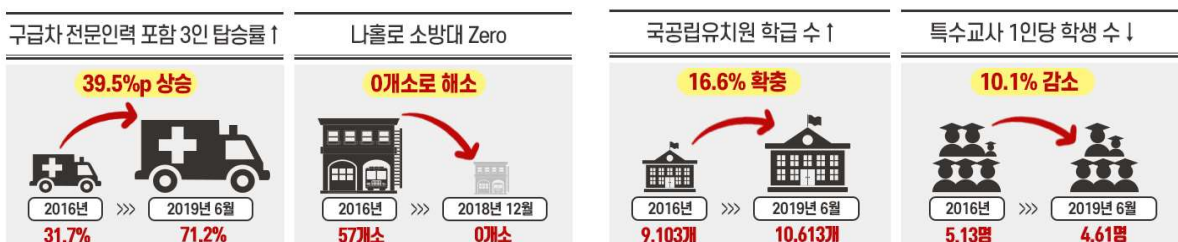
- 주민중심 자치분권 국가 구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1.1.1. 시행),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19.7.1.)과 지자체 조직·인사 운영상 자율성 강화로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 1단계 재정분권의 완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8.5조원),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 일반사업 전환*, 지역 간 균형장치** 마련 등 성과 창출
 - * 39개 국고보조사업(3.6조원) 전환 ** 소비세 배분 시 지역기중치 적용, 상생기금 출연기한 연장

-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추경예산 편성(52.2조원),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일지리사업(7.8만명) 전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3조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기반과 사업 확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국민이 소통·숙의하는 혁신거점 공간 조성
주민주도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유휴 저활용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국민 아이디어 활용, 지역사회 소규모 문제 해결 선도

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

- 사회적 가치·참여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으로 혁신 성과 가시화
 - 안전·환경 정책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 * (안전) 어린이·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환경) 종이컵·비닐 등 사용 저감
 - ** OECD 정부신뢰도 순위 상승('17년 32위 → '19년 22위, 10단계 ↑)
-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정부혁신 방향성 정립
 -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8월 시행),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15, '17, '19년)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취약계층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확산 등 선제적·통합적 서비스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행안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추진으로 포용성 강화
 - * 임신·출산진료비, 엽산·철분제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 KTX 특실 할인 등
-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및 기존인력의 신규분야로의 재배치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II.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국민안전)** 재난대응 역량은 증가하였지만, 예측 불가능성 증대* 및 신종재난(미세먼지·ASF 등) 발생 등은 꾸준한 대응체계 혁신 요구
 - * '19년 여름철 태풍·호우특보 609회(최근 5년 평균 342회 대비 78% 증가)
-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예방 중심 사회로 도약할 필요
 - * 안전수칙·규정 위반, 점검·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
- 특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기대 고조*
 - * 통학버스 사망사고('19.5)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19.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
- **(지역활력)** 획기적 자치·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 이행으로 분권국가 토대는 마련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의 저활력 상태 계속
 -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18년 합계출산율 0.98)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제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지역 활력 저하
 -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42%(97개)가 소멸 위기(고용정보원, '19년)
 - ** ('17년 시·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2.3%, 경기 6.6% vs. 경북 △1.2%, 울산 △0.7%
 - 자치·재정분권의 추진 성과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역활력 대책 마련 필요
- **(정부혁신)** 혁신성과의 본격 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시기로, 참여와 협력의 질적 제고 및 공공서비스 혁신에 경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모습 구현과 참여 수단의 실질화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성과 창출 필요
 - 그간 기관·사업마다 분절적으로 제공*된 공공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
 - * 국민 74.3%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18년 사회서비스조사)

목표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추진전략
·
중점과제



이행기반

국민의 요구

적극행정

중앙·지방 협치

혁신성과

핵심가치

혁신

포용

안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0년 핵심 추진과제

①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형 투자를 늘리고, 국민과 함께 일상 속 위험을 정비하여 '먼저 생각하고 예방하는' 안전사회로 전진

(1)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인 투자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 신종·복합재난, 인명피해 다발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국민 일상의 위험 제거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공시제도 도입 등 안전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등

** 재난안전예산 : ('19년) 15.9조 → ('20년) 17.5조 / '24년까지 21조로 확대

○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확대로 생활권 도로 內 안전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확충 및 제한속도 하향(30km/h) 등으로 '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 ('19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569억 원 → ('20년) 1,767억 원(약 3.1배)

- 안전속도 5030(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교통약자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 환경 정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22년, 2천명↓)

○ 재해예방사업(저수지·급경사지 등 5개 분야, 5,075억 원) 중점 투자·관리

-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마을 공동체 단위를 정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 지방하천·하수도·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19년 27억 원 → '20년 313억 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1,000원 투자로 4,000원의 편익 발생

□ 신기술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상황관리능력 제고

- 경찰·소방·자치단체 등 현장 유관기관이 공동 사용(멀티미디어 활용)하는 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20년)
* 음성·영상이 가능한 4G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 GIS 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20.6월)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20년),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등 대응역량 강화
*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투자 기반조성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우수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 지원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21년 시범사업) 추진,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 중앙 - 지방 간 재난안전 R&D 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로 재난안전 R&D 주도적 역할 강화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R&D : ('18년) 8,988억 → ('20년) 1조 3,020억 → ('22년) 1조 5,134억

[2]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

-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진단대상 선정* 및 자치단체 평가 확대(시·도→시·군·구)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제고
*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정
-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점검 효과 극대화
* (1단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비상구·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부터 우선 추진
→ (2단계) 법적근거·인력·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 밀접시설 중심으로 안전정보(점검결과 등)의 대국민 공개* 및 지도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
*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 우선 공개('20년)

□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281개소) 폐지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4대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추가



- 기능이 유사한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 통합 및 기능 고도화(자동신고분류, 챗봇 상담 도입 등)를 통하여 신고 편의 증진
-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 유도
 - *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훈련 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 종합안전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 및 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교육기관** 육성
 - * '21년까지 7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21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련
 - ** 전문 교육인력 1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100개 지정(~'22년)
- 재난대응 훈련의 시의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기·유형별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참여형 '안전한국 훈련' 실시(연 1회)
 -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3)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 재난 유형별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한 재난(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시)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 공동차장제*(행안부-주관부처 장관) 도입
 - *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주관부처) 분야별 전문성(감염병-복지부, 방사능-원안위 등)에 기반하여 대응·수습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 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재난 초기,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 구축으로 현장 작동성 제고
 - '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
 - *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기관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및 협력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활용) 등

【참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

- **(협력체계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방역활동 지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리, 복지·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대구·경북(청도)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조정으로 신속히 해결
 - * (대구) 12개 기관(4개 반) 33명 / (경북) 7개 기관(4개 반) 23명
- **(지자체 행·재정 지원)** 재난안전특교세(743.5억원)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 *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 **(기타)**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2.27.), 정부·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제고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등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추진
 - *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 재난대응 분야 위치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중앙대책본부와 통신사업자(SKT, KT, LGU+) 간 피해자 위치정보 공유체계* 구축
 - *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화
-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및 ‘재난 유형별 민·관 협의체’(‘19년 15개 → ‘20년 18개)를 통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 공고화*
 - *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 지역의 위험요인을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여 예방계획 수립 및 집중 관리하는 ‘지역단위 위험성* 분석’ 제도 도입
 - * 예) 시설물 노후도·위험도, 화재·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재난 피해자 대상 **재난심리회복 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자치단체 행·재정 지원 강화
* 중앙·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 설치 소요 기간 단축(60→30일)
- 자치단체 **재난관리 전담인력**(방재안전직 등) **보강** 등을 통해 지역의 재난관리 전문성 및 상황관리능력 강화

□ 포괄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 안보위협·재난 등 복합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계획 개선** 및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을지태극연습’*** 실시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 **다중이용시설 경보 전파**를 위한 전용단말 보급 등 **경보체계 고도화**

[4]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시민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고도화

- 주민 참여형 치안협의체 등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노력*** 강화
*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 탄력순찰 목표관리제, 주민접촉 순찰제 등 주민친화적 순찰을 시행하고, 기관 협업을 통한 **예측적 범죄분석 시스템*** 도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線 지정 등에 활용

□ 사회적 약자 보호 내실화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

- 가정 폭력 대응모델 고도화, 불법촬영 범죄 대응 강화 등 **對여성 범죄** 대응력을 향상하고, **아동·노인·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1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피해의 근본적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확대(120개서)
* 성폭력 피해자 AI조사 도입, 2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
-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범죄 엄단**
 - 사기(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성착취물 등 **신종 범죄 근절대책** 마련
 - **일상생활 속 반칙과 편법 집중 단속**,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미제 사건 추가 수사 등으로 신뢰받는 경찰 모습 구현

②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 지방자치를 통해 축적된 지방의 경험·자산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혁신으로 활력 있는 지역 구현

(1)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참여의 보장

-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확산* 및 활성화**, 참여예산·도시재생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연계를 통해 읍·면·동 혁신플랫폼으로 고도화

* ('17.5월) 47개 → ('18년) 95개 → ('19년) 408개 → ('20년) 600개

**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公暇)·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

- 주민직접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소환·발안제도* 개선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식 확산으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전문성·현장성을 활용하는 참여구조 마련

* 지역혁신포럼('19년 6곳 → '20년 8곳),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19년 4곳 → '20년 5곳),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19년 10곳 → '20년 36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 현장과 성과 중심의 규제혁신

- 규제개선 쉰 과정에 주민과 기업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 참여범위: ('19년) 민생규제 → ('20년) 민생규제+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수시발굴-상시개선 체계로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규제개선 결과가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도록 규제혁신 사후관리 강화

□ 청년을 통한 지역의 창의성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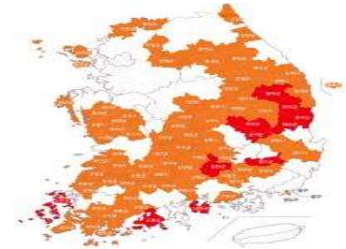
-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획·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20년, 2.6만명)

- 청년 활동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청년의 소멸위기지역 정착 유도**
* 지역 내 빈집·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력의 마중물로서 **마을기업 육성*** 추진
* 지역특화형·모두앳마을기업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2]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

<인구감소위기지역>

□ 인구감소 위기지역 집중 지원



- 인구감소에 대응한 **소규모 지역단위 공공·생활서비스 체계 개편**
 - 읍·면·동 일선행정기관 기능 재설계*, 주민시설·기관의 공동설치·운영 확대 및 거점-주변지역 간 순환·연결(Network) 체계 구축 추진
*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 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시, 인구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quota)** 도입·확산 추진
*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의무 규정

□ 섬·접경지역 등 저성장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전국 어디에서든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 서비스를 위한 **낙후지역 기반시설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
*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7개소) 등
- **섬·접경지역 특화 관광개발***과 **교통망 확충****으로 **지속가능 발전방안** 마련
*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8.7.~8.9. 통영), DMZ 內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
**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고성)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군사적 특수상황**에 따른 피해·소외지역* 지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5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문화 확산
 -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녕 캠페인*** 확대
 -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1지역 1안녕 프로젝트 추진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완결적 처리와 미래지향적 후속조치로 과거와 미래의 포용적 통합 추진
 - **민주인권기념관과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광주·제주)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20년~)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확대***와 제주 4·3사건 등 미해결 과거사 정리 및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
 - 타라와 유해 봉환 및 사할린 유해봉환 관련 한·러 협정 체결 추진, 제주 4·3 희생자·유족 심사 및 결정(~'20.6.)
 - * (범위) 일본·사할린 →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 (방식) 정부 → 정부+민간
- **탈북민·외국인주민** 등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류·참여 활성화***
 - *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이북5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3]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재정분권 구현

□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

-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참여제도 개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으로 자치분권 가속화**
 - 단체장 중심의 획일적 기관구성에서 탈피,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위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률 제정 추진
 - *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개선) 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② 위원회형 ③ 약(弱)단체장형 등

-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혁신, 교육 자치와의 협력 강화 등 지방자치 청사진 제시를 위한 「자치분권 미래비전 2030」 수립 추진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기관 위임사무의 **집행 자율화****와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로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 * 1차 이양사무('21. 1. 1.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
 - **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 후, **5개+α 지역**(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사무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마련
 -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재정인센티브**** 강화
 - *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228조원의 60%(137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 용도 개편·성과관리 강화로 지역활력을 위한 역할 확대
- **지방세 지출과 지방공공기관의 경기부양 역할 확대**
 -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지원 강화
 - **지방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대상 합리화** 등으로 **지역 공공투자 확대** 유도
-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발행과 지역기업 수주 활성화, 내 고향에 기부하고 공제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 * **발행규모 확대**(^{'19년} 2.3조원 → ^{'20년} 3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 실현

○ 중앙과 지방 간 정책적 소통 노력 강화

- 대통령·시·도지사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추진 및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중앙-지방 공론장인 지역상생 정책포럼 출범*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 지자체 간 복지·환경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역간 협력 활성화 추진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관할구역 경계조정* 지원 강화

*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 국민 최접점인 지방행정에서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

*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③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공공서비스 혁신', '참여·협력'의 질적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부응하는 정부의 대응 역량 제고

(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 추진

- 참여와 협력,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4대 역점분야 선정 및 추진

< 4대 역점분야 >

- ① (참여)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② (협력)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 ④ (일하는 방식)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사람이 먼저인 대민 디지털서비스 혁신

- 임신·아이돌봄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 패키지 확대**(^{'20년} 2종*, ^{~'22년} 10종 이상)

* **(맘편한 임신)**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14종 연계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4종 연계

-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신청하는 **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 ^{'20년} 국가보조금 사업 → ^{~'22년}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 **모바일 기반의 국민편의서비스 확대**(“Mobile First”)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보관하고, 관공서·은행 등에 방문 없이 전송하는 **전자증명서 확대**

*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
 → ^{'20년말}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 ^{'21년} 300종까지 확대



- 온라인으로 고지·안내받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 부여(^{'20.10월}~)

*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 대폭 확대

- 국민이 느끼는 우선 현안에 대해,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도전. 한국’ 사업 추진**

*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플랫폼 운영



- **‘광화문1번가’**를 통한 각종 온라인 제안창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공론 및 정책화 기능 확대

- 제안 숙성 강화 및 참여예산제와의 연계로 정책반영률 및 효능감 제고

- 정책제안, 정부평가, 국민포상 등에 **국민 추천·심사 등 참여비중 확대**

□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기틀 마련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도래로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낡은 체제 극복 계기 마련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 수립(~'20년)
- AI기반, 세계 1위 전자정부로의 제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전자정부 2025 기본계획」 마련, 디지털 행정혁신 촉진 및 지능형 서비스 확산 근거 마련 등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와 민간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 기술 진보에 부응하는 전자정부 추진방식 혁신
- 차세대 지방재정·세제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 혁신(~'22년)
 - 보조금 부정·이중수급 방지(재정시스템), 지능형 탈세대응기반 마련, 실시간 세수분석을 통한 자치단체 의사결정 지원(세제시스템) 등 추진

□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편리한 공공웹사이트 환경 구현

-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와 정부 사이트 內 간편한 본인 인증수단인 디지털원패스** 지속 확대(~'22년)
 - * '20년까지 2,728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간편 로그인 시스템
-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 「문서24」를 통해 '공공웹서식'을 확대 보급하고, 어떤 SW로도 접근가능한 개방형 문서표준(ODF) 공공서식 도입
- 민원신청 등 정부서비스를 친숙한 웹사이트·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

[2] 데이터경제 활성화

□ 안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 가명정보 활용 등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신속 정비

- EU GDPR 적정성 결정 등 급변하는 국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적시 대응
 - 우리 기업·국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대응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의 산업분야별 적용가능성 검토
 -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원칙(국가안보·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제외)하에 기업·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사회현안 데이터*를 대폭 개방
 - 국가데이터맵과 Open API 확대로 공공데이터 활용 편의성 향상 및 융·복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 * 6대 핵심 영역 :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
-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데이터 기업 지원 및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으로의 지원 확대를 통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 정부 내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D 지원 확대 등
- 국민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및 자기정보 활용권 확대**
 - * (현행) 증명서 제출 ⇒ (향후)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다운로드·제공
 - **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

□ 정부조직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 긴급대응반*·벤처형조직** 활용 확대, 행안부 사전협의 범위 축소***로 부처의 현안대응 능력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제고
 - *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 드론·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 ***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생활밀착형 협업 과제* 중점 발굴 및 기관 간 협업모델 확대
 - * (예시: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고용부·산단공·안전보건공단 협업)

-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충원을 지속하되, **본부 정책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상시화**하여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매년 1% 이상)을 신규·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 현장중심 행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현장점검·조사, 복지활동 등 **현장행정**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 세종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모바일 행정 고도화** 등 **업무환경 혁신**
 - 출장·이동 중에도 업무가 가능한 G드라이브와 웹오피스 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해 1인 2PC → 1노트북 체제*로 전환
 - * '20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RPA)***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 도모
 -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업무를 AI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 안전성·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도입
 - *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 국민중심의 정부운영 지원 기능 강화

-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과 엄정한 법정선거사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 *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소극행정 행태 단속
- 전세계 협력요청이 쇄도하는 한국 행정 및 전자정부의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 *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20년 신규 4개→8개) 및 **신남방·신북방 교류협력 확대** (20년 우즈베크정부 파견), **전자정부 ODA 사업 확대 추진**,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 안전한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22년)으로 세종시대 완성
 - * 연면적 13만㎡,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 ◇ 형사소송법 개정(20.2.)에 따른 수사권 개혁 완수 및 수사 책임성 제고
- ◇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기반을 확충하고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시스템 확고히 정착

□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및 경찰수사 책임성 제고

- 대통령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과 협의하여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및 수사권 개혁 관련 연계법률 개정 추진
 - 하위규칙 및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등으로 신속한 현장 정착 유도
- 수사 쏠 과정에 걸친 실효적 통제 및 국민 참여·감시 확대
 - 메모권 보장·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 *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사를 전담하는 사건관리과 설치 및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도입
 - *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
 - 수사배심제 개념을 도입, 시민의 관점에서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 수사 역량 함양을 통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균질성 확보
 - 지방청 內 전문 수사파트(사이버, 과학수사 등) 확대, 지능범죄·광역 수사대 확대, 법과학감정실 설치 등 통해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확립
 - 법률·회계·의료 등 수사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고 통솔범위 조정(소팀제), 서면지휘 활성화 등 수사지휘 책임을 강화
 -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선발 종합평가제’를 도입, 경력·자격·인성 등이 검증된 수사관 선발·배치 및 개인별(신입·전문·지휘) 맞춤형 전문화 교육 실시

□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기반 확충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권한·사무·인력을 배분하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로 경찰수사의 중립성·독립성·전문성 제고*
 -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청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감시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 활성화
 - *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 경찰 정보활동 근거와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
 - 동법 시행령·경찰청 직제 등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21세 미만→42세 미만)·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軍 전환복무 제도·학비 면제 등 특혜 폐지
 - * '20년 모집'2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명→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 편입학은 '22년 모집'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 경찰활동 전반에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개방직 인권정책관 신설, 경찰업무 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총괄
 -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된 인권영향평가를 집회·시위분야까지 확대하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중심 치안행정 정착
- 유치장 - 직접수사부서 분리, 수사부서의 조사·사무공간 분리, 영상 녹화실 확대 등 수사상 인권보호 환경 조성
- 대화경찰 및 현장안전진단팀 역량 강화를 통해 소통 위주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가자·국민·경찰의 안전 확보
-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20.6월~), 경찰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정착

IV.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5만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격차는 낮아지고 대형재난 대응역량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1,500대 우선 설치
-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완료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폭넓게 활용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 주민등록 부여체계가 45년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자리에 임의번호 부여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임신, 아동돌봄, 전입신고 등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도 「정부24」에서 일괄 확인·신청 가능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공공·금융기관에 제출



‘도전 한국’ 플랫폼 개시

- 국민이 느끼는 우선 현안에 대해,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도전. 한국’

국정과제 (또는 핵심정책)	추진현황	향후계획
<p>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6차)에 따른 심의·결정 추진(~'19.12월) * 접수(21,392명), 심의·결정(13,637명, 63.7%)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대안)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회부('19.10월) ○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기본·실시설계 착수('19.12월)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확대 - 일본 지역(74위/'19년), 사할린 지역(42위/'17~'19년) 유해 송환·안치 - 타라와 지역 「한·미 업무협약」 체결('19.8월)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총사업비 조정(295억→402억), 유해매장 추정지 우선 매입('19.12월)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16.) 지정 및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6차)에 따른 심의·결정 완료('20.상) ○ 「과거사정리법」 개정 추진(법사위 및 본회의 대응) ○ 민주인권기념관^(가칭) 설계 완료, 공사 추진('20.하) ○ 태평양 지역^{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추진('20.상) ○ 전국단위 위령시설 건축 설계공모, 유해발굴('20.하) ○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 폭력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20.1월~광주·제주) ○ 5·18 40주년 사업 지원
<p>⑤ 365일 국민과 소통 하는 광화문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자문위원(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브리핑('19.1월)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마무리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 ○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 통합 공개 확대('19.12월) * (기존) 각 부 장관 등 28명 → (확대) 17개 청 및 17개 시·도 기관장 일정 추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이전계획 수립 ○ '주요인사 일정공개 운영 지침' 수립
<p>⑥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데이터3법*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9) ○ 한-EU 간 회의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GDPR 적정성 초기 결정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법 공포후 6개월) ○ 한-EU 적정성 결정 협의 지속 추진

국정과제 (또는 핵심정책)	추진현황	향후계획
<p>⑥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및 시민 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이명수('16.10월) 의원안 등 상임위 계류중 ** 권미혁('19.1월) 의원안 등 상임위 계류중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365자원봉사포털 개선('19.7.10.~12.31.) 및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연구 용역 추진(~'19.4.8.~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 협의 등 지속 실시 - 현재 법체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발굴 추진 ○ 1365자원봉사포털 사용 편의 지원 등 기능 개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지속 추진
<p>⑧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록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공포('19.12월) ○ 각급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19.12월) ○ 열린소통포럼(11회) 개최('19년), 국민 참여플랫폼 기능 개선 ○ 6개 지역혁신포럼 추진위 구성 및 31개 협업의제 실행 종료('19.7~11월)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4개소 선정 및 조성('18~'19년)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19.12월) ○ 국가데이터맵('19.4월)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추진 ○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19.2월)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지능형 정부 로드맵,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등을 마련하여 차세대 지능형 정부를 선도 ○ 공공웹사이트 내 플러그인 제거 * 70.8% 제거 완료(2,728개 웹사이트 중 1,9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20.12월) ○ 다양한 참여기제를 연계한 열린소통포럼 활성화(계속) ○ 지역혁신포럼 신규 지역2개 내외 선정1월, 협업의제 실행~11월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신규 1개소 추가 조성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확대(계속)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지자체·공공) 구축('20.3월)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신산업·자율주행 등 19개 분야) ○ 디지털 정부혁신 중장기 로드맵 마련('20년) ○ 공공웹사이트 내 플러그인 완전 제거('20년)
<p>⑬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검 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2월) - 차장 주관 '책임수사 추진본부' 설치('20.1월), △법령정비 △제도개편 등 경찰수사의 책임·전문성 강화 정책 총괄 ※ 자기번호노트·영장심사관 확대시행 등 현장 수사제도 개선 노력 지속추진 - '경찰수사 개혁(Re:Design)' 추진, 책임수사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 △(내부) 사건 무작위배당 등 배당체계 개선 △(외부)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정하고,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조치사항 이행 - △국가수사본부 설치 △일반경찰의 수사권여 통제 등 경찰수사의 공정·중립성 제고

국정과제 (또는 핵심정책)	추진현황	향후계획
<p>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안 발의('19.3월) -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확대(3단계) ○ 경찰개혁 완수에 정책 역량 집중 ※ 총 330건 세부과제 중 81%(268)건 완료 - 정보활동범위를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 경찰대생 특혜*폐지 등을 담은 경찰대학 개혁방안 발표 * 입학 상한연령 완화, 학비·병역 면제 폐지, 신입 선발인원 축소, 여성 선발한도 폐지 등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19.12월),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관련 「경찰법」 등 법률 개정 노력 지속 - 법률개정 이후 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 ○ 경찰개혁 미완수 과제 속도감 있게 달성 - 개혁법안 조기 입법으로 제도·법제화에 총력 - 개혁과제 모니터링 및 현장 안착 지속 점검
<p>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신설('19.4월) - 범죄취약지역 1,884개소에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11,617개 설치 -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29만 개소 탄력순찰 ○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체계 구축('19.5월) - △불법촬영 범죄 △웹하드 카르텔 △악물 사용 성폭력 사범 연중 집중 단속 ※ △불법촬영 5,560명 △웹하드 운영자 72명 · 업로드 557명 △마약류사범 10,411명 검거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엄정대응, 검거건수 각 19%·22% 증가 ○ 지문·DNA 분석 등 감식 역량을 고도화 하고, 미세사건 전담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해결 등 성과 ○ 경찰인력 2만명 증원 목표로 '19년 현재 8,509명('19년 4,582명)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체계 구축 ○ '여성안전 사회안전망' 위한 대외 협업·연계 체계 마련 ○ 현장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치안R&D 계속 - 「치안신업진흥법」 등 입법 지연 중인 법안 관련 국회 대응 ○ 법과학감정실 총 7개소 신설 추진('20년 2개소) ○ 의경대체·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증원 지속
<p>66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 초등학교 보도·보행로 892개소 설치 ○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1,020개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 설치

국정과제 (또는 핵심정책)	추진현황	향후계획
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6만 1,588개소 집중 점검 ※ 점검결과 공개율: ('18년) 77.3%→('19년)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잠정연기) ※ 최근 사고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 위주로 선정
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건물, 위험물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18.7~12월): 17만 2천개동 2단계('19년): 38만 2천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추진('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밀접 5대 체험* 중심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 참여인원: 노인·장애인·다문화 89,090명, 어린이·교사·학부모 등 63,7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추진
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중대본·관련 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 재정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매뉴얼 미비점 검토 등을 통해 지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17년 2회, '18년 이후 4회),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확충 등 ○ 안전한국훈련 민간 참여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국: ('18년) 1,013개, ('19년) 1,166개 - 어린이: ('18년) 34개, ('19년) 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실시 (4회) 및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계속) ○ 안전한국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국: ('20년) 1,210개 - 어린이: ('20년) 9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준공('19.9.), 2단계 착수('19.11.) * 통합대응체계 지원, 구축·운영예산 최소화 ○ 재난문자 용량을 확대(60자 → 90자, '19.4.) 하여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추진(~'20.8.) 및 3단계 착수('20년~) ○ 5G시대 대비, 긴급재난문자 용량확대 추진(90자 → 157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소방력 보강 및 소방문서 신설('19년 19개소)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11.19.)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공포('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문서 신설 지속('20년 18개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개정('20.4월)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20~'21년), 착공('21년), 준공('23년)

국정과제 (또는 핵심정책)	추진현황	향후계획
<p>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9.12.2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참여3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주민조례발안법) 제·개정 추진(상임위 계류), 전략적 홍보·토론회 개최 등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 추진동력 확보 *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등 ○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일괄법 공포(20.2.18)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운영('19.7.1.) ○ 지자체 기구설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19.4월)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18년 47개 → '19년 40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참여3법 등 국회 통과 주력 및 하위 법령 정비 추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새로운 의회제도 정착 지원 ○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준비, 이양에 따른 지자체 행·재정 지원 제도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20년 600개) 및 고도화 추진 ○ 지자체 간 협업확대를 위한 협약제도 도입 방안 마련
<p>㉕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재정분권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10%p 인상, 8.5조원 확충 - 국고보조사업(3.6조원)의 지방 일반사업 전환, 재정 균형장치 마련(상생기금 출연 등) ○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 교부세율 25%p 인상 완료('19.11월) ○ 지방세 지출 합리적 재설계로 '19년 지방세 감면율 13.2% 달성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 '19년 예산낭비신고 575건 접수·처리 ○ 참여에 의한 예산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TF 논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20년)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일몰예정인 지방세 감면 검토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p>㉖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p> <p>㉗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법 개정('17년) ○ 중앙행정기관(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 계획 변경 고시('18년) 및 세종시 이전 완료('19년) ○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20년~'22년)